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Chungcheongnam-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충남전문건설회관 5층
Tel. 041) 330-2400 Fax. 041) 330-2498~9
cn.pass.or.kr

발간위원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팀장 최승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팀장 이상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장 이영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수영

발행처: (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인쇄 및 디자인: (주)손디자인(041-331-2993)

- 복지정책 이슈 및 충청남도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본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 및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정책연구팀 (041-330-2439, free1088@cn.pass.or.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충청남도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복지정책 Brief

2021. 10. Vol. 06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충청만

행복한
충청만이
만듭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Chungcheongnam-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행복 중만

contents

기획주제

'함께 돌봄' 실현, 출생율 제고가 아닌 새로운 돌봄정책의 방향_005

정책이슈

충청남도 저출생 정책 진단 및 대책_00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해결과제_009

실천이슈

학교와 마을의 이음터, 경천마을학교 천은자 대표를 만나다_011

충남 아동학대 대응체계_014

현장속으로

출산, 패러다임을 바꾸자_016

아이에게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_018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_020

'함께 돌봄' 실현, 출생을 제고가 아닌 새로운 돌봄정책의 방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승이 연구위원

2002년 합계출산율 1.17, 2005년 합계출산율 1.08이라는 저출산 쇼크와 함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돌봄정책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가령, 2005년 6,077억 원이었던 보육예산은 2021년 8조 5,568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20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돌봄기관이 늘어났지만 질을 신뢰할 수 있는 곳은 부족하다. 조부모 도움 없이는 아이 양육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돌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일 중단 또한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지금도, 여전히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려운 사회이다.

우리는 그동안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급급했다. 서비스 공급은 민간에 의존하고 정부는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 결과 민간기관 비중이 높고 질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용료 부담은 줄었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족 특히, 여성의 양육부담은 줄지 않았다. 돌봄노동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가 되었다. 가족 밖에서 돌봄은 또 다른 여성이 주변화되어 수행하는 노동이 되었다.

그러나 돌봄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으로, 주변화되어 질 낮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거친다는 돌봄윤리 학자들의 논의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몸소 경험했다. 트론토(2014)¹⁾는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돌봄을 받고,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본다. 돌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함께 돌봄, caring with), 모든 시민이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고 돌봄 책임이 민주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한 돌봄분배와 그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민주적 돌봄 실현을 위해 국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봄 책임이 공유되고 분배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돌봄욕구가 공적 지원이 필요한지, 누가 어떻게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모든 시민 특히,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돌볼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2018년 ILO는 변혁적 돌봄 정책의 원칙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와 대표성을 제시하며, 돌봄수혜자, 무 유급 돌봄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야 현 돌봄의 현실을 반영하고 돌봄 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돌봄노동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과 적절한 보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수혜자들의 요구를 정확하고 민간하게 파악하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이 역시 돌봄노동 처우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가는 돌봄노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자들의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관리 감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을 받는 아동들이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돌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 출산을 꺼리는 것에는 태어날 아이의 삶이 팍팍할 것이라는 생각도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 계층, 인종 간 불평등한 돌봄분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은 돌봄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 확대는 돌봄 부정의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뿐이다. 돌봄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화되는 사회에서 출산과 돌봄을 택할 사람이 있을까?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으로 인한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돌봄관계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되고 누구나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의 위기는 돌봄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좋은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익숙한 사회가 되었다. 정책 영역에서도 출산율 제고가 아닌 삶의 질 제고로 정책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논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실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돌봄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 좀 더 과감한 기획과 투자로 새로운 돌봄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1) 트론토, 조안(2014),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 나상원(역), 서울: 아포리아(Tronto, C. J.,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맹준호 연구위원

충청남도 저출생 정책 진단 및 대책

첫째, 저출생 정책의 명확화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충남도의 저출생 정책을 살펴보면, 그것이 저출생 정책인지 의문이 드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2018-2022)의 추진전략 중, 결혼하고 싶은 환경조성 영역은 주거지원 및 결혼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등의 추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시적 측면에서는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저출생 정책으로 포함된 것은 정책의 혜택이 저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 중, 행복주택은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도 기본 6년에서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들이 저출생 정책으로 포함되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나타낸다.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정책의 직접 지원사업과 간접 지원사업을 명확히 분류하고 각각 투입되는 예산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직접 지원사업 대비 간접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사업이 효과적이지를 먼저 평가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2020년 합계출생률은 0.84명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합계출생률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971년 100만 명대의 출생아 수가 2020년 20만 명대로, 반세기만에 1/5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매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부터 15년간 투입한 예산 규모만 해도 약 225조 3천억원이다. 올해도 저출생 관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생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생률은 0.8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03명 감소하였다. 이대로 간다면, 또다시 합계출생률은 최저를 기록할 것이다.

반면, 충남도의 2020년 합계출생률은 1.03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민선 7기의 출범 이후, 3대 위기(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극복이라는 기조 아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합계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도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출생률이 감소하는 원인을 다시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출생률 감소의 원인을 충남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진단해 볼 수 있다.

둘째, 돌봄의 연속성 부재이다.

충남도의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임신부 전용창구 개설 및 우대금리제도, 충남형 행복키움수당 도입, 공공기관 육아기 근무 단축,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출산에 대한 지원이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인 반면,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아무리 영유아에 대한 공적 지원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취학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돌봄 부담은 여전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영유아 시기일 때보다 취학 후의 여성경력단절 비율이 높아진다.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이 짧고, 방과후돌봄의 미비로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충남도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요 대비 34.6%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조차도 도농격차로 인한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 및 학교·교육청, 지역사회 등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로 인한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맹준호·안세아, 2020). 충남도는 2023년까지 돌봄수요 대비 100%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저출생 정책은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연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단편적인 저출생 정책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셋째, 실효적인 일·가정 양립제도의 시행이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적극적인 시행과 다양한 제도 도입은 매우 반길 일이나, 반드시 실효적이지는 않다. 육아휴직제도는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공공기관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도의 정책 기조를 공공기관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이다. 충남도가 도내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육아휴직제도가 자리잡힐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도 돌봄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아서 퇴근 후 집에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단순히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라 그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업무에 대한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없이 제도 시행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상 충남도 저출생 정책을 세가지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저출생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니 인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출생률 제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삶에 대한 가치의 패러다임이 이미 가족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사회구조도 개인의 삶의 질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은 계속 가족중심적 삶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를 포기하는 개인적인 선택은 존중하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자기 생활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개인 중심적인 삶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내 아이가 이 사회에 태어나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다면, 출생률 또한 점차 높아질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해결과제

충남도청 출산보육정책과
양승록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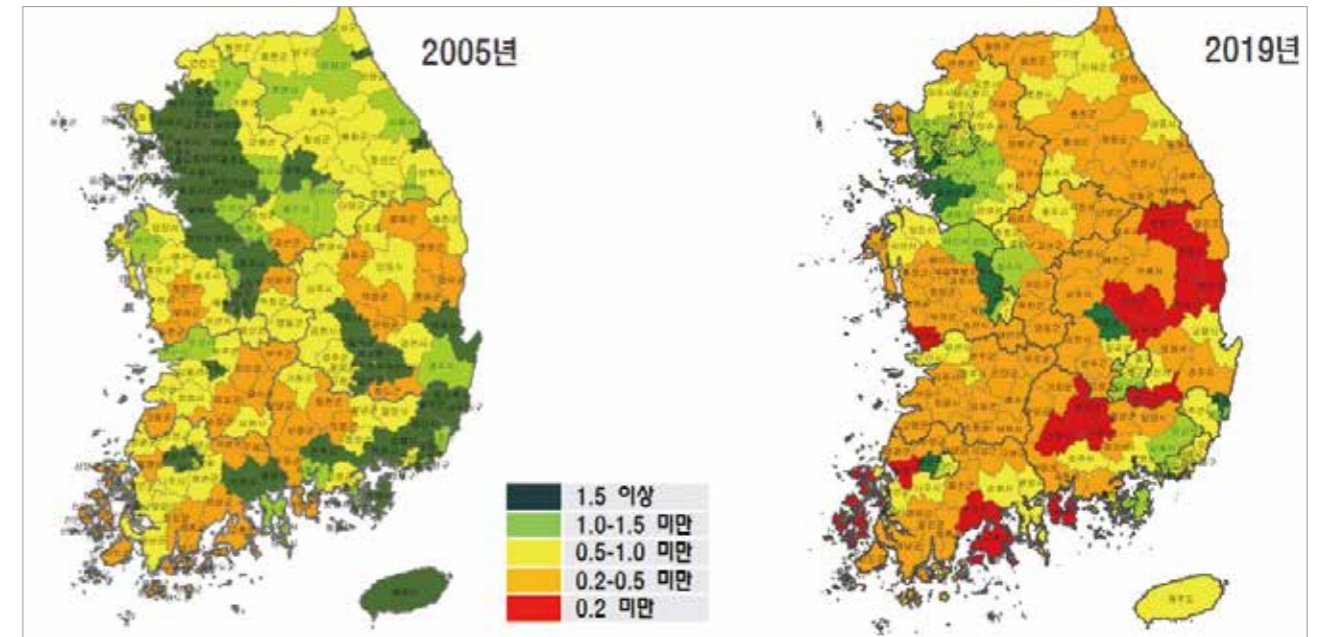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합계출산율은 민선 7기 첫해인 2018년 1.19명, 2020년 1.03명으로 전국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 시도와 비교하여 감소폭은 낮은 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위기상황이지만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역의 소멸위험지수(이상호 연구위원)에 의하면 2019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97개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충남의 대부분 시군구가 소멸위험진입단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충남도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제를 최우선의 도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변화된 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임신, 출산, 양육지원 강화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행복키움수당 지급(월 10만원/36개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다자녀 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산모 산후건강관리비(20만원),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25만원),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40만원), 난임부부 한방 치료사업 지원(100~150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부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신부 전용 민원창구 운영, 임신부 119 구급서비스, 임신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우대금리 1.5%)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실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충남아이키움뜰 운영, 교통안전용품 지원,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을 공급 예정(1,000호) 등의 사업을 하고있다. 셋째,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18기관), 가족 친화 우수기업 표창(187개소),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시설 확충(6개소), 워라벨 실천기업지원(27개소 출산유급휴가 지원금 등) 등을 통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이상호(2019).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2019년 한국의 지역소멸위험 현황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2019년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선정 및 2020년 공모사업 선정(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특별교부세 4억 확보), 2020년도 보육시책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2020년도 임신부의 날 기념 임신·출산 시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저출산 극복시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선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와 마을의 이음터, 경천마을학교 천은자 대표를 만나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이수영 전문연구원



Q. 경천마을학교(마을도서관@경천 작은도서관)은 어떤 인연이 되어 시작하게 되었나요?

Q. 대표님, 경천마을학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에 경천중학교와 경천초등학교 있는 중간지점에 마을도서관@경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을속의 학교, 학교속의 마을인 경천마을학교는 경천중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의 휴식처와 문화심터를 제공하고자 2018년 11월 마을도서관@경천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공주시 작은도서관과 비영리단체인 경천마을학교로 등록이 되어 마을에 사는 운영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천마을학교의 3가지 특징은 첫째 어린이들에게 돌봄의 휴식처, 둘째 학생들에게 학습과 만남의 장, 셋째 어른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을과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배운 재능을 마을교사가 되어 다시 마을에 돌려주는 선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함께 마을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 학생들이 방과 후 1~2시간에 한 대인 하룻길 버스를 기다리며 그대로 기상과 계절의 노출을 받아야만 했으며, 문화공간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고, 독서, 휴식, 문화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으로 경천중학교에서 10년 이상 공실 건물에 2018년 9월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과 개관준비를 위해 운영위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경천중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었고, 교장 선생님의 부탁으로 도서관을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부모 자원봉사위원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이는 모두 순수 자원봉사자로 다들 본업이 있었던 터라 요일을 순번제로 돌아가며 봉사를 합니다. 또, 지역 여건에 맞게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추어 문을 열었으며, 시내로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으로 문을 열고 아이들을 위한 미리크리스마스나 일요일 도서관에서 보는 시네마 극장,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한 영화 나들이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캘리그래피 배우기와 마을 벽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시청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지역 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공동 돌봄 프로그램과 모두를 위한 마을도서관 프로그램, 경천마을 소소 마켓을 통한 재능기부와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10명의 자원봉사자는 현재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올해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을 경천마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A. 이 사업은 2021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인 계룡면은 31개의 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딸기나 버섯, 블루베리, 쌈채소등과 같은 하우스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농번기 인력부족과 맞벌이 가족들이 대부분이어서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부족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수가 많아 돌봄 공백이 많은 편입니다. 또, 귀농, 귀촌한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있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평생학습에 대한 열의도 있으며, 특히 공동체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손잡고 아이들의 꿈을 품다”라는 경천마을학교의 슬로건처럼 학교와 마을의 이음터로서 마을의 학생들을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지역의 어른들의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와 손잡고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함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맞춤형 돌봄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가며 학생-학교-학부모가 안전하게 믿고 맡기는 방과후 돌봄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작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방과후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A. 방과후 12개 프로그램은 경천초등학교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마을도서관과 초등학교 공간을 이용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방송댄스, 계절요리, 독서역사교실, 배구, 뉴스포츠, 탁구, 코딩, 밴드, 우쿨렐레, 종합미술, 수학보드게임입니다. 저녁 돌봄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방과후가 끝나는 시간에 도보로 마을도서관으로 이동하여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안전한 돌봄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녁돌봄 프로그램은 화, 목요일에 열리는데 그림책놀이, 색종이접기, 만들기, 비즈, 요리, 보드게임, 공예등 다양합니다. 또, 엄마표 봉사단과 협력학교, 지역주민들의 마을돌봄 참여로 재능기부와 교육기부를 통해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직접 만든 간식을 제공하여 농번기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안전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온종일 방과후, 돌봄 만족도가 높은편인데,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A. 우선 마을 방과후는 강사들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학교에 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높은 기타소득세와 서류가 복잡합니다. 또, 저희가 위탁업체다 보니 고용보험이 안되고 경력도 학교 경력이 아닌 저희 위탁 업체 경력으로 인정되다 보니 강사들 입장에서는 저희 마을학교와 계약하는 것보다 학교와 계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또, 매회 수업에 들어가는 재료를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니 번거로운지 강사들이 재료를 잘 사지 않더라고요. 이는 수업의 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매회 수업 시간 사진을 찍어야 하고 출석부에 직접 학생들 서명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는 업무과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책임과 협력의 경계도 모호합니다. 마을학교의 강사관리와 학교와의 관계와 학생 관리등에 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지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조레나 법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 돌봄은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입니다. 마을학교는 조직이 다 갖추어진 곳이 아닙니다. 대표가 나서서 상근하면서 해야 할일들이 많고 누군가는 맡아서 많은 부분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대표와 운영진은 인건비를 받는 일에 대해 제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으나 댓가없는 봉사는 없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A. 마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류의 간소화, 매뉴얼 보급과 회계시스템 제공입니다. 또 중간조직의 실질적, 정기적 지원과 장기적인 인건비, 운영비의 안정화와 마을학교의 인적 질적 역량 강화 연수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마을방과후 돌봄을 마을에서 할 수 있게 정착하려면 지자체, 학교, 마을학교의 마을교육공동체 의식과 협력입니다. 지자체, 교육지원청, 마을이 함께 협약을 맺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마을을 이해하며 돕는게 중요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세우고 중간조직을 활성화하여 문제점들을 국가수준에서 일괄정리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게 국가에서 사회에서 마을에서 통합된 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남 아동학대 대응체계

충청남도 보육지원팀
이혁민 주무관

일반적으로 학대는 강자가 약자의 몸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학대는 직장, 가정, 학교 어디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2021년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구체적으로 첫째, 현장대응인력을 배치하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2021.7.1.기준)을 배치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하였다. 둘째,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세부 지침 시행을 마련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현장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대행위자 양형기준을 강화를 제안하였고,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미참석한 아동과 위기아동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보도자료 2021.8.19



정부의 기초 아래, 제가 근무했던 홍성군은 2020년 6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원리, 아동 의견 존중)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 말까지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기존 아동드림팀1개에서 아동친화팀과 아동드림보호팀 2개 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각 유관기관 간 아동학대 피해사례와 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보호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홍성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랑샘, 청로회,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충청남도과 시군에서는 아동학대조사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보호팀(천안, 아산, 서산, 홍성)을 설치하였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7명을 배치하였다.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2020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그룹홈을 2개소 증설하여 현재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다. 학대피해아동의 지속적이고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를 민간사회복지법인(굿네이버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아동인권에 대한 중요성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령 강화에 다른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지원사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예방과 사전 사례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 및 도민교육, 아동학대예방캠페인,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아동학대 캠페인 34회, 언론 등 매체를 통한 홍보 682회 진행하였다(충청남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아동학대는 가정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동은 가정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학대 위험 상황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충청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일이다.

청양군 산부인과
김상경 원장

출산, 패러다임을 바꾸자



저출산 쇼크, 인구절벽,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산아수, Total Fertility Rate) 0.84명¹⁾, 2021년 저출산 정부 예산은 42조9천억원, 충남도 저출산 비용(충남도의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0년 8001억원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관련 정책과 사업이 쏟아지고 있으며 예산도 들이 붓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듯하다. 충청남도 임신과 출산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신 청양보건의료원 산부인과 김상경원장을 만나보았다.

역은 난임환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혼하고도 연관있고 늦게 결혼하는 사회변화도 있겠지요. 40대가 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임사업을 좀 더 지원하거나 난임지원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난임지원에 필요한 서류가 제한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우리 지역에 생각보다 외국인 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변화를 하고 있겠지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 일본 국적 여성이 많은데요, 이 분들이 불임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동유럽쪽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 서인지 이 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직 한국 국적이 없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안되는 것이지요. 이 분들은 미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분들을 말하길 '사회적임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 미혼여성의 임신, 10대 여성의 임신 등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 포함하는 거죠. 이 분들이 아이를 낳아도 출산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 못 낳는 거예요. 그렇지만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아이 낳아서 키우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분들에게는 영양지원도 해주고, 병원비도 지원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Q. 저출산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대전과 외국에서 근무하시고 홍성군의료원 산부인과 원장을 거쳐 현재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이자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보고 계시는 김상경원장님이 생각하는 충남의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A. 저는 임신과 출산의 현장에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제 직업상 경험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들은 임신부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충남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느냐의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 감소할 것입니다. 결혼식 자체를 연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실제 제가 만나는 사례를 살펴보면, 재혼을 하거나 늦게 결혼을 해서 불임 쪽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

1)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Q. 김원장의 사회적임신이라는 용어가 새롭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용어라고 본다. 기존 사회적임신에 속한 임신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낙인이나 차별의 용어로 사회는 이들을 분류했다. '사회적임신' 관련한 생각들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이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A. 임신과 출산 정책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넓혀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운 여성들에게도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을 수 있는 지원금 2-3천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임신과 출산은 정상가정에 초점을 두었는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을 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건전하지 못한 임신은 없어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를 낳고 키우지 못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지원만 충분해도 아이 낳고 키우고 싶어 하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까지 보조를 해주면 사람들이 키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는 것까지 도움을 주지만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인 거죠. 외국은 아이를 낳아놓으면 키우게 해주죠.

자연적 임신한 산모들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이 더 필요해요. 비용적으로 볼 때 사회적 임신을 지원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출생율과 관련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적이어서 사회적 임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정보라서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10명의 아이를 낳을 걸요. 10명을 임신하게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회적임신에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충남 15개 시군 별로 10명 아이를 낳는다면 전체적으로 150여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어림잡아서요.

Q. 김상경원장의 제안한 사회적임신의 개념을 충남도에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특히 충남의 외국인 여성의 경우 제가 뭘 해주고 싶어도 건강보험, 국적 이런 게 없으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사례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아이 낳게 키우게 해주면 출생률이 올라가는 거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출생률이 더 높게 하는 방식이 많은데 우리 너무 협소하게 정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세계화되면서 외국인이 많아요. 대학생들도 꽤 많이 임신을 해요. 성이 꽤 개방이 되면서 19-20세 임신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두 사회적임신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년에 100명 중 40여명은 없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공공산후조리원, 구급대, 건강관리 등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류가 복잡해요. 양육환경조성도 다 아이 낳고 난 다음의 지원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아이 낳기 전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산모가 되었을 때 누구든 아이 낳기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요. 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임신을 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산부인과로 상담을 많이 해요. 저는 의학적인 상담만 해줄 수 있지 제가 뭘 결정할 수가 없어 난감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임신지원센터라고 할까요? 이런 지원기관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많이 돌 필요도 없어요. 사무실 만들어서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는 것이지요. 충남에 1곳만 있어도 됩니다.

초점을 임신해서 갈등하는 과정에서 산모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해야 합니다. 나이가 있고, 판단력 확실한 분들은 생활능력도 있고 조금만 도와줘도 아이 낳아서 잘 키우거든요. 출생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잘 낳아서 키워야 하는 거죠. 예산을 지원한 보람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리려면(출산율이) 안 올라가요. 1년에 3-4명만 낳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차라리 생활비를 줘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낳게 하자. 15개 시군에 15명이 낳는 거죠. 여기에 1-2억 썼다고 하면 더 좋은 거죠. 낳고 나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장 박석란 인터뷰



충청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가정위탁사업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정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아동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18년째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과 세종 요보호아동 600여명을 가정위탁보호 사례관리와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안양육으로서 가정위탁을 연계하고, 이 후 양육과정에 있는 위탁가정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실제, 이혼 후 한부모가 건강이 안좋은 경우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한 사례, 모의 우울감이 높은 경우, 미혼한부모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위탁하는 경우는 대부분 상황이 호전되면 아동을 원가정을 복귀하게 된다.

위탁가정의 발굴의 어려움이 많아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위탁이 필요한 아동을 맡아주겠다는 위탁가정을 찾지 못할 때가 힘들어요. 홍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효과가 잘 나고 있지 않죠.” 현재 위탁가정의 경우 아동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학대아동의 경우 경제분리가 아닌 경우 원가정의 위협으로부터 위탁가정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아동의 소재지 열람을 금지하기는 하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좁은 지역사회를 감안하면 아동이나 위탁가정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의 사망 또는 사고시 법적으로 위탁가정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 위탁부모가 친부모에게 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비혈연의 아동을 위탁하겠다고 신청하는 위탁가정의 부담은 커질 뿐이다.

양육비와 인프라 지원이 많이 부족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연령대별 양육비를 차등지원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 이양사업으로 양육비 금액을 ‘권고’로 되어 있다 보니 최소 30만원 지원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위탁가정의 사명과 헌신에 의지한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외국의 경우 책임을 물 수 있는 만큼 넉넉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자체별로 지침에 준한 현실적인 양육비 책정이 필요해요. 또한 사회복지사 1인당 70-100사례를 담당하고 있는데 충남과 세종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1년에 1회 이상 아동가정 전체를 방문 상담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인력을 포함하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지역별(예를 들어 동서남북 권역별) 센터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정인이 사건과 같이 이슈에 따라 가정위탁을 대안으로 자주 거론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이 후 위기가동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를 가정위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 경우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top down식 정책으로 인해 그 현장의 어려움은 쌓여간다. 시군 담당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처리의 어려움도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단 현 제도에 충실하길

충남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기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잘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제도 한 두 개를 만들기보다 큰 틀에서 아동이 행복한 충남이 되기 위한 방안이 먼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에는 아동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동중심의 정책, 아동최우선의 정책, 모든 정책과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 아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 주거, 교육 등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때, 아동들의 권리는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며, 아동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기관은 아동권리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동의 문제에 있어 당사자는 성인이 아니라 아동이 되어야 한다.

충남의 조손가정에 대한 제도 마련 시급

충남의 위탁가정 중 가장 많은 부분(약80-90%)을 차지하는 사례는 조손가정과 친인척위탁이다. 그 중 대략 10%정도 조손가정이 위탁부모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 가정위탁 사례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 아동들이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조부모인 경우(빈곤, 질병, 세대갈등 등) 책정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지자체에서 다른 보호방법이 없어 가정위탁을 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충분히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천안에 1개소 밖에 없어 접근성이 문제로 집중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가정위탁사업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손세대를 위한 별도의 제도나 지원, 연구가 시급하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세상 그 자체

“아이들에게 부모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위탁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는 일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참 살만하고 따뜻할 때 아이들은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관리자와 사전 유선 협의)
- 제출서류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
업무공백 관련 증명서류(사회복지시설 내부서류 근무상황부, 휴가원 등)
사회복지시설설치 신고(허가)증 (최초 신청 시)
* 이메일(3651004k@cn.pass.or.kr)
- 문의사항 충청남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041-330-2477